

투데이 칼럼

원전 주변지 주민 안전, 우선시 하는 국정감사 바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이달 12일부터 시작하여 20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부 에너지 정책 핵심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5년 5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10km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음을 인정하여 원전 반경 28~30km로 확대했다.

물론 여기 구역에는 원전 비소제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관련 지방세법 부칙에 정부는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방사능 비상구역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당 0.5원

에서 1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원전 소재지와 비소제지 모두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해 놓고서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방사능 비상 시 피해가 원전 소재지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인 지 앞뒤가 맞지 않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나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사능 방재를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되어야 할 돈이다.

정부가 세금을 2배 이상 증액하고도 비소제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나몰라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리나니 하고, 최소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깝

다.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원전 비소제지 지역 방사능비상 계획구역 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상 한계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원전소재지 지역은 매년 수백 억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아 수많은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원전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병폐라 할 수 있는 원전소재지 지역 주민과 비소제지 지역 주민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비상계획구역에 성내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이 포함되는 고

창군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비상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주 소개토와 임시 대피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오염지역에서 구조활동을 전개할 소방대원과 방사능방재요원에게 지급할 기본 장비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전북을 포함하여 강원, 경남 등 비 소제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풀리지 않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지역자원시설세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전력산업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방사능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전개할 고마운 이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사설

전북형 일자리창출 대비하고 있나

전북형 일자리 창출에 온전히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번에 정부의 정책 기초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여 주목이 되었는데 말이다. 도시와 각 실국장과 일자리 정책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만들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한 것이 그것이다. 지역 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세운 것이며 17개 과제 대상을 이야기한 것이며 '일자리 안정 자금지원책'과 '청년내일일자리 채용공제'를 도입하려했던 것들 말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려선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격려이다. 전북도는 전임 정부 때 도내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것을 각성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지만 아직도 젊은이들로부터 불만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북도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반비례하여 관청은 일자리가 적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북도가 여러 번 말했던 바 전북형 일자리 찾기는 매우 중요하다. 전북형 일자리 찾기는 글자 그대로 피 터지는 경쟁이 아닐 수 없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침에 따라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 쪽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져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전북도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부터 미리 전북형 일자리 창출을 힘차게 시도했으면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다. 본보는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도는 보다 더 분발해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취직 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 상당수가 이 지역을 떠나 살고 있다는 오늘이다. 전북도는 그러므로 전북형 일자리 창출의 성공 신화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대형마트 업체들 왜 이러나

대형마트업체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 또 구설수에 올랐다. 연 매출 1조원의 대기록을 세우고 있음에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블랙홀의 역할만 하고 있으니 골백전이다. 그래서 여기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지난해 지역 거여도가 쥐꼬리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불쾌할 뿐이라고.

이마트 등 16개 점포가 지난 3년간 3조원대의 큰 돈을 싸들이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래 시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동네 골목의 슈퍼마켓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은 그래서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업체들이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행태는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지역을 위한 환원자금이라는 게 겨우 연 12억 원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익창출이 목표라고는 해도 인색함이 그 정도면 기네스북 감이라는 생각이다. 코끼리에게 비스켓 하나 던져 주고 반응을 때보자는 것인지 정말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난 수년간 대형마트업체들이 보이는 영업 행태는 해도해도 너

무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가려는 정신태도를 다시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 년 전의 일이 생각난다. 전주시가 영세상인들과 상생해야 한다는 협조를 요구했을 때 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말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의 영세한 상인들로부터 같이 먹고 살자는 요구를 거세게 받았는데 그때 대형유통업체들은 그에 따라 주었다. 그것은 고마운 변화였다. 그런데 그게 그뿐이었다. 대형마트 업체들이 그때 상생을 말했지만 그 상생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인지 오늘날 알 수가 없다.

대형마트업체들은 지역 소비자들과 친화하려고 해야 한다. 마치 못해 쥐꼬리의 끝 부분만 잘라주는 식의 생색 내기 작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익 창출이 우선하는 시대이지만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만 깔쳐둬 휘두르면 지역사회에 희망이 없다. 거듭 말하지만 공존과 상생의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 마땅하다. 도민들과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아야겠다.

독자제언

무단횡단 지름길이 황천길 될 수도

도로에서 운전할 하다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 당황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야간에 발견하기 쉬운데 무단횡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무단횡단에 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단횡단사고는 새벽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시간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부주의한 상태에서 과속을 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시간에 자동차가 다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단횡단을 해 무단횡단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무단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경찰관들은 주로 무단횡단사고의 대

상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야광 띠나 야광 지팡이를 드려 만약의 경우 반사광을 통해 상대 자동차가 주의해 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 무단횡단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와 차의 사고위험은 물론 보행자를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가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 무단횡단은 엄연한 범죄이며 보행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무단횡단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예방방법보다 '나 하나뿐이야'라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재원 전북경찰청경찰관리과대순경

독자제언

근거없는 유언비어, 결국 모두가 피해자

유언비어(流言蜚語)란 흘러가는 말, 해충 같은 말이라는 뜻으로, 해충처럼 때로는 소문이란 뜻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소문 가운데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줄수 있는 소재에 사회불안요소가 섞이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위시로 SNS가 발달하면서 파급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이 장난스럽게 지어낸 글이 생각지도 못한 파문을 일으키며 사회전체를 쥐라퍼락하기도 한다.

올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두고도 이러한 근거없는 유언비어와 마치 자신이 직접 수색활동에 참여한 듯 허위사실을 유포, 이러한 사실은 급격하게 퍼져 우리나라 사

회전체의 불안과 상호불신을 일으킨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언비어를 악용해 그 사안의 관련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 '미녀사냥'이 이어질 경우 엄청난 희생과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일부가 퍼트린 이러한 유언비어가 의혹으로 그 의혹이 과담으로 둔갑하면서 국민전체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유언비어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발본색원 되어야하지만, 근거없는 유언비어의 무분별한 '퍼나르기'와 그로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옴을 국민모두 인식하고 무분별한 유언비어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규 군산경찰서수송과출소조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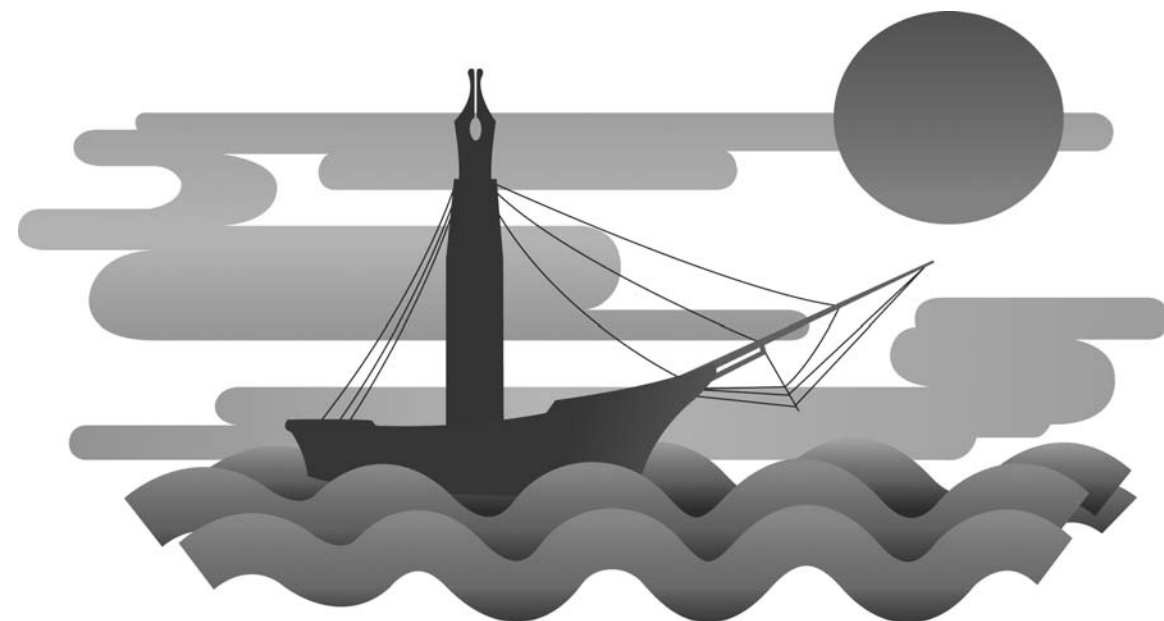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